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auri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과제	거주자 행태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대응방안 연구	강현미
수탁 과제	건축자재 품질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법·제도 마련 연구	유광흠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고려한 생활SOC 확충 및 도시재생계획 수립 방안 연구	염철호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발전방안 연구	김상호
	제1차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오성훈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연구 영역	조영진
	도시 취약지역 내 민·관 협력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이여경

수시과제

① 거주자 행태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대응방안 연구

매년 겨울과 봄철에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가 대기 중에 정체하는 현상이 극심하여 국민 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핵심정책과제로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18년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제정을 필두로 대기환경 및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각종 법령들을 제·개정하면서 관련 부처별 정책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상의 미세먼지 대책들은 대규모 배출원 관리와 민감계층 집중보호에 중점을 두며, 공간적으로는 광범위한 대기환경 및 배출원에서 학교·어린이집·교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로 관리대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월경성 미세먼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국내 배출원 관리와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간단위 대응으로 「미세먼지법」 제22조와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있으나, 그 기준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에 따른 즉각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에게 전달되는 행동수칙은 ‘외출자제’와 ‘대중교통 이용’ 권장에 머물러, 불가피하게 외부활동을 해야 하는 많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노출 상황과 노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생활 가운데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상으로 일상적 생활환경의 개선과 정보 제공을 통해 거주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빅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통해 거주자 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기법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제안한다.

강현미

수탁과제

① 건축자재 품질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법·제도 마련 연구

최근 제천 복합스포츠허브 화재사고에 연이어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각종 화재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이 사회·제도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작·유통상의 문제로 인한 불량 건축자재와 건축자재의 오시공·미시공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전예방 차원의 건축자재 관리수단의 부재와 불량자재의 제작·유통을 통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발생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리제도 및 대상을 확대·적용하고,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업자와 부실 시공한 시공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2019년 4월 「건축법」을 개정하였으며,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관리에 이르는 단계별 품질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불량자재의 제조·유통·시공 행위에 대한 행정 및 형사상 제재 수준이 높지 않아 건축자재의 성능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의 보강 및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제안함으로써 불량 건축자재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자재와 관련 산업의 현황조사 및 실태파악을 통한 문제점 진단과 관리수준 설정, 국내외 품질관리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방향 도출, 정책 실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과 법 제도 도입방안 제시로 구성된다. 이 연구를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체계와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보장과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유광홍

②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고려한

생활SOC 확충 및 도시재생계획 수립 방안 연구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인당 시설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전국 동일 기준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현재 각 시·군·구 단위로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현황 분석 조서가 배포되어 지자체별로 기초생활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계획 및 도시재생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초생활인프라는 지자체의 인구 규모와 밀도에 따라 시설밀집도가 달라 시·군·구별 격차가 크며,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인구분포에 따라 격차가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적 최저기준과 인구밀도 및 인구분포 현황 등 지역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기초생활인프라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전략적 공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하여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국가의 투자전략으로 설정하고, 2020~2022년의 투자계획 등을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2019년 4월에 발표하였다.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의 생활SOC는 곧 기초생활인프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활SOC도 기초생활인프라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 소외 지역에 어떻게 적절한 규모로 공급할지에 대한 시설 공급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생활SOC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초생활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생활SOC가 지역 활성화의 앵커 시설로 작동하는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전국 단위 데이터 구축과 공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활SOC 우선 공급지역을 도출하고, 생활SOC 공급 필요량과 공급 효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인프라 및 재생계획 수립 현황 등을 진단하여 기초생활인프라 소외 지역의 생활SOC 공급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염철호

③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발전방안 연구

지역개발사업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부터 산업단지·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장소단위의 통합적 디자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지역개발사업의 디자인관리 체계와 절차를 담은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본 가이드라인의 시범 적용 및 선도 사례 발굴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5개 지역(전북 순창, 전북 무주, 경남 하동, 충남 예산, 경북 영주)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운영지원과 그 진행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운영지원의 주요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총괄디자이너’의 선정과 ‘디자인협의회’의 구성, ‘디자인 관리기준’의 설정, ‘디자인 마스트플랜’의 수립, ‘세부디자인 지침’의 수립 및 단계별 사업발주와 관련된 일련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특별히 디자인 공간 전략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이런 컨설팅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 제도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지역개발사업의 디자인 품격 향상과 질적 수준 제고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 우수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선순환적 환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호

④ 제1차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우리나라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보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 달리 국가 차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지침 등이 부족한 상태이며,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정책적 목표 및 계획 내용이 국가 정책 방향과의 관계 정립 등에 있어 일부 혼란을 초래하고 단발성 사업계획을 종합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행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체계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1차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보행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체계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상의 비전과 목표 수립,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제시와 투자사업계획 수립 등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통해 국가 보행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이라는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성훈

⑤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연구 용역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발생 범죄의 사후 처벌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범죄 대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범죄예방 선진국인 영국·미국·호주 등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범죄예방 환경개선 프로그램이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도입되었으며, 법무부·국토부·행안부 등의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환경과 다른 해외 사례가 그대로 국내에 도입되거나, 일부 국내 성공 사례를 반복 및 적용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 수립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법무부 수탁과제로 그동안의 범죄예방환경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단위의 공간환경 개선사업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산업단지 재생사업’,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공간안전디자인 계획의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환경 분석, 범죄영향평가, 중·장기 범죄예방 계획 수립, 기초설계안 제공, 사업결과 성과 분석 등 일련의 공간안전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내 환경과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공간안전디자인 모델을 제시한다. 이 밖에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을 거쳐 구축된 범부처 협업체계와 지원기반을 통하여 공간환경 개선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어 지속적·거시적 관점에서의 공간안전디자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조영진

⑥ 도시 취약지역 내 민·관협력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 사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 낙후지역에서 상하수도, 도시가스, 마을공동체시설 등 ‘생활인프라 정비’, 집수리와 빈집 철거 등 ‘주택 정비’, 노인돌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휴먼케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뜰마을사업은 1년간의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포함하여 총 4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5년 선정

지구의 경우 2018년 말을 기점으로 국비 지원이 종료되었다. 지난 4년간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전문적·기술적 지원,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요구되는 주택 정비와 휴먼케어 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다. 또한 건립된 마을공동체시설은 향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해 나가야 하지만, 사회 취약계층이 밀집된 사업지 특성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 인식을 토대로 2018년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새뜰마을 내 주민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을 기획하고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라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8년 시범사업 추진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2019년에는 민·관협력사업 유형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 시범사업」 등 3가지로 확대하였다.

이 연구는 민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역량 있는 민간 주체들과 새뜰마을 주민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가지 민·관협력사업을 운영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새뜰마을 내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비 종료 이후에도 도시 새뜰마을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마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여경

2019 AURI 건축도시포럼 ‘미세먼지 위기에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환경’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7월 10일(수) 서울특별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19 AURI 건축도시포럼을 열었다.

‘건축도시포럼’은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이해를 높이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분야별 현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할 수 있는 발전적 담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 위기에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환경’을 주제로, 건축·도시 생활권 단위에서의 미세먼지 현상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최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이승민 부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도시지역 미세먼지 현황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으며,

박종순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확산을 위한 도시 바람길 도입 방안’을 소개하였다. 또 이은석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미세먼지 양상을 고려한 생활공간의 미래 지향적 대응’을 제안하였으며, 이병희 책임연구원(LH 토지주택연구원)은 ‘실내 미세먼지 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의 연구동향과 전망’을 공유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여명석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태오 과장(국토교통부), 안승홍 교수(한경대학교), 채수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성훈(건축도시공간연구소), 최형욱 과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패널로 참여해 ‘미세먼지 위기에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환경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제4회 마을재생 세미나 ‘말보다 주먹 : Self Build’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7월 26일(금)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동묘하다에서 제4회 마을재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건축·도시 분야의 학생과 전문가·공무원·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말보다 주먹 : Self Build’를 주제로, 도시재생 실천전략으로서의 사용자 주도형 공간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유휴 시설이나 노후 건축물을 재조성하여 혁신거점으로 재생하거나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리모델링, 리노베이션이 도시재생을 이루는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이중 사용자가 직접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에 참여하는 ‘사용자 주도형 공간조성’은 저예산으로 신속하게 거점공간을 정비하여 사용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경관 개선,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등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 도시재생 실현 과정에서 높은 활용가치를 가진다.

이에 윤주선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셀프 빌드(Self Build)와 마을재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전찬수 대표(풀라베어)는 ‘셀프 인테리어와 골목재생’이라는 주제를 소개했다. 또 코노나오 대표(츠미키 설계시공사)가 ‘함께 만들기’라는 주제를 선보이는 등 이번 세미나를 통해 리노베이션 실행기법과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주선 부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현장 전문가인 나영규 대표(상생장), 심영규 PD(프로젝트데이), 이종건 대표(오롯컴퍼니)와 함께 공간 운영자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사용자 주도형 공간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19 범죄예방 환경설계 포럼 ‘범죄안심 공동체, CPTED의 미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경찰청은 9월 19일(목)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2019 범죄예방환경설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범죄안심 공동체, CPTED*의 미래’를 주제로 최근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과 공동체 중심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열렸다. 이에 전문가들과 함께 경찰청의 ‘공동체 치안 협의체’,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 최근 범죄예방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발표내용으로는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범죄예방 환경설계 ▲방범성능검정제도화 및 표준화를 통한 실효적 범죄예방의 구현 ▲공동체 치안의 발전을 위한 CPTED의 나아갈 방향 등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전반이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경찰청은 범죄예방 정책 및 국민안심 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해왔으며, 행사 당일 두 기관은 상호협력을 위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범죄예방 관련 공동연구 ▲범죄예방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다세대·다가구·연립 등 공동주택의 범죄예방방안을 담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이 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 셸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CPTED):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



건축서비스 혁신기업 지원방안 기획 워크숍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9월 19일(목) 연구소 7층 대회의실에서 건축서비스 혁신기업 지원방안 기획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건축서비스 혁신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건축서비스 산업·서비스산업·건설산업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 건축서비스 혁신에 관한 대내외 인식을 공유하였다. 산업의 한 분야로서 건축서비스를 이해하고, 서비스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관점에서 건축서비스에 필요한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건설 및 서비스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건축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에 김성진 대표(디지털 건축연구소 워드웍스)는 ‘건축서비스에서의 혁신’라는 주제로 창업과정과 지원경로 개척, 수혜경험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장병열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산업적 관점에서 보는 건축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정주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산업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본 건축서비스산업 혁신방안’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부터 특성과 육성방안 등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이뤄지는 혁신의 개념을 짚어보고,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동향을 파악해 건축서비스 산업 혁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살필 수 있었다.



제2차 AURI 경관포럼 ‘경관을 보고 읽는 다양한 시선’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9월 26일(목) 서울 히브루스 코워킹센터에서 제2차 AURI 경관포럼을 열었다.

이제까지 경관 관리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등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포럼에서는 ‘경관을 보고 읽는 다양한 시선’이라는 주제 아래 경관의 개념과 가치를 확장된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진종현 교수(공주대학교)가 ‘문화지리학의 경관이론과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강영조 교수(동아대학교)의 ‘몸으로 보는 경관’ 발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관에 대한 인식을 접할 수 있었다. 이어진 토론

에서는 이상민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좌장을 맡고 김아연 교수(서울시립대학교)와 배정한 교수(서울대학교)가 패널로 참석해 미래 경관 정책 방향 및 어젠다 발굴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한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센터는 국토경관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국토경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올해 총 4회에 걸쳐 경관포럼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 개최된 ‘제1차 경관포럼-국토경관, 현재와 미래’는 미래 국토경관 정책 어젠다 발굴 및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제4회 경관아카데미 : 전문가 경관교육 심화프로그램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7월 11일(목)과 12일(금) 양일간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사)한국경관학회와 공동으로 제4회 경관아카데미를 열었다.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은 2013년 전면적 개정을 통해 임의적으로 수립하던 경관계획을 의무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경관심의 강화 등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특히 2017년 경관현장 제정 이후 경관인식 향상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한국경관학회는 국토경관 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제별 경관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행정담당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관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전문가를 위한 경관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전문가 경관교육 심화프로그램'을 주제로 기존 경관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경관 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관련 심화교육을 구성하였다.

11일에는 경관제도·경관계획·경관심의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강사진을 초빙해 이론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12일에는 경관자원조사와 도시재생에서의 경관사업에 관한 강의 및 모의경관심의를 다룬 워크숍과 토론 등을 마련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2019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실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7월 16일(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19 공공기관 관계자 대상 공공건축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공공건축 관계자들을 위해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 아래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한 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먼저 방대혁 사무관(국토교통부)이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현황'을 주제로 공공건축의 현황과 정책, 제도 등을 설명하였다. 엄철호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를 통해 사전검토 제도뿐 아니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전했다.

이어 박석환 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설계공모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설계공모 제도의 이해'를 발표하였으며, 심경미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총괄·공공건축가의 도입배경부터 역할과 운영현황 등을 아우르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외에 김광현 명예교수(서울대학교)를 초청해 공공건축에 관한 교양강연 '미래 시민과 함께 자라는 건축'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